

한라포커스 안개 속 예레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공공사업으로 전환... 토지수용성 '관건'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1~2년 추가 소요
 부지내 인프라 철거시 옛 예레유원지 맹지 전략
 높은 가격 토지 재매입시 예비타당성 통과 난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예레휴양형주거단지 사업부지에 새로운 개발방식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사업부지 내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들의 동의 없이 새로운 공공사업 추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레휴양형주거단지=JDC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한 예레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2조5000억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서귀포시 예레동 소재 74만1000㎡ 부지에 숙박시설과 의료·상가 시설 등을 짓기로 했던 사업이다. 2015년 7월 대법원 사업 무효 판결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고 사업 인·허가까지 취소됐다. 이에 따라 버자야그룹은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JDC가 1250억원을 버자야그룹에 물어주는 조건으로 소송은 종결됐다.

또 140여명의 토지주들은 JDC를 상대로 "토지를 돌려달라"는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유 토지는 전체 사업부지의 40%가 넘는다.

JDC는 토지주들이 참여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토지주들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로운 사업 추진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주민 대부분은 사업 재추진을 희망하고 있으나 토지를 돌려 달라는 토지주도 있어 토지 재수용이 관건이다. 현재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가운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소송은 2건이다. 나머지는 진행중이며 앞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판결을 보면 토지주들에게 당시 보상받은 땅값에 이자, 토지가 유익하게 변한 것에 따른 이익까지 내도록 하고 있다. 이는 토지주들의 토지 환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소송을 통해 토지를 되찾는 토

지주는 자신의 토지 내 설치된 도로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JDC관계자는 "현재 수백억원을 투자해 조성한 도로와 교량, 생태공원, 저류지, 주차장 등 인프라와 공정률 66% 가량의 건축물들이 들어섰는데 이것들을 다 철거하면 구 예레유원지는 다시 맹지가 된다"며 "그러면 승자는 없고 피해자만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일부 토지주들은 토지강제 수용 후 15년이 지난 만큼 당시 시세보다 10~30배 이상 쥘서 토지를 다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500억원이상 투입되는 공공기관의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정한 법령에 따라 사전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타당성이 있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타당성이 낮으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JDC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원하는 가격을 주었다가 이후 사업 타당성이 안 나오면 정부의 승인을 받고 공공사업으로 끌고 갈 수 없다"며 "JDC가 무한책임을 갖고 토지주들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고대로기자**

내년 국비 1조8191억 '역대 최고' 전년보다 22.6% 늘어... 4·3배보상 등 반영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191억원을 확보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2년 정부 예산안의 국비 확보액을 자체 집계한 결과, 역대 최고인 1조 8191억원으로 파악됐다고 1일 밝혔다.

2021년 1조4839억원과 비교해 22.6%(3352억원) 증가했고, 정부예산 증가율 8.3%보다 14.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는 당초 국비 확보 목표 1조 5500억원보다 2691억원 웃도는 규모다.

특히 제주형 뉴딜사업을 포함한 내년도 현안사업이 2021년도보다 10.4%인 1542억원이 증가한 1조 6381억원이 반영됐고, 4·3 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배보상예산 1810억원이 새롭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9월 이후 결정되는 부처 총액사업과 공모사업을 감안하면 최종 국비 확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에는 증가율이 정제되고 있는 균특회계 제주계정사업 예산 확보가 두드러진다. 내년에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비 3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전년 2403억원보다 13.1%인 315억원이 증가한 2718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부 균특회계 예산이 마이

너스 0.6%인 643억원 감소한 반면 제주도는 13%대의 괄목할만한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 사업 및 예산액을 보면 SOC분야는 ▷광명-도평 평화로 우회도로 건설 20억원 ▷화천-신촌 구국대로 건설 65억원 ▷와산-선릉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 30억원 ▷화순항 건설 99억원 ▷추자항 건설 69억원 등이다.

환경 분야는 ▷에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31억원 ▷노후상수관망 정비 87억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65억원 ▷서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5억원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 가스화시설 80억원 등이다.

농·수축 분야는 ▷유기농산업복합 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 90억원 ▷감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109억원 ▷농업융수 통합 광역화사업 175억원 ▷배수 개선사업 210억원 ▷양식 수산물 규격화지원 15억원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 22억원 등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현안 사업의 상당수가 반영되는 성과도 거뒀다"고 설명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 코로나19 누적 확진 2623
 1월 1일 기준



가을 노래하는 팜파스그라스 1일 서귀포시 휴애리자연생활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화려하게 피어난 팜파스그라스를 카메라에 담고 있다. 팜파스그라스는 벼과의 여러해살이 초본식물이다. 원산지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등 남아메리카의 팜파스 지역이다. **이상국기자**

제주도의원 증원 특별법 연내 개정 '촉각'

이번 정기국회 내 개정해야 내년 지방선거 적용
 송재호 의원 "입법추진단과 논의 법 개정 총력"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오는 12월 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내 법 개정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기 대선이 내년 3월에 치러지는 만큼 정기국회 기간이 마지막 입법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나설 예정인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광역의원 정수 증원 법 개정

안을 낸 제주특별자치도와 보조를 맞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송 의원은 1일 한라일보와의 통화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균형발전특위 산하 제주 세종특별자치시 입법추진단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처리하는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광역의원 증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증원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다,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타 시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

한 것이다. 또한 2018년에도 한차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의원을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한 터라 연속 증원에 대한 부담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내년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증원(지역구 2명+비례대표 1명)하는 방안과 '최소 인구 선거구를 기준선거구로 지정하는 기준선거구제 도입'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채택했다.

제주자치도는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 절충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부미현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김두관 의원 인터뷰 "제주, 환경특별자치도로 개편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62)은 1일 "제주를 환경특별자치도로 개편하고 더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라일보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주요 대선 공약인 균형발전국가 공약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2면

김 의원은 "이제 지방자치 30년이 지났으니 지방자치를 더욱 심화시키

는 것이 우리 몫"이라며 "지방정부에 과세권과 입법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본권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특히 입법과 재정 부문에 있어 메가시티와 자치도는 연방 수준의 본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주4·3과 관련해서는 "내년 정부 예산에 1차년도 보상금이 포함됐다. 진실규명 작업과 함께 보상, 배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

했다.

또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전제하에서 제주의 공항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면서 "제2공항만이 아니라 기존 공항 확장이나 기존 여타의 공항을 이용하는 것 등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가진 역사와 문화 가치, 지방의 고유한 경쟁력을 가장 잘 살려내도록 앞서 고민하겠다"며 "이 일의 책임자는 자치분권을 오래도록 일궈 온 김두관이라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강조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 수학 축제

한라대나
 민도
 수학이우다
 (모든 곳에 수학이 있어요)

21. 10. 30. (토) ~ 31. (일)
 10. 30. (토) 수학체험전, 수학경진대회, Math Tour
 10. 31. (일) 수학체험전, Math Tour

2021 온택트 제주수학축전에 초대합니다.

● 신청 기간: 2021. 8. 30. (토) ~ 9. 17. (금)
 ● 신청 방법: '체험 프로그램 신청 QR코드'로 신청(택배 개인 신청)
 ● 행사장: 제주대학교 (제주도) (2021. 10. 30. ~ 31.)

주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주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